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한동근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양극화, 경제민주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정치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이라면,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정치에 등장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큼을 반증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경제양극화의 개념에 대척(對蹠)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양극화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 부가가치 창출 등 생산 활동에서 중간계층이 얹어지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허리가 튼튼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의 양상과 정도는 사회통합과 성장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선 소득 측면을 살펴보자. 소득분배구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매년 지니계수가 커지고 있다면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이후 악화되는 추세이다. 1992년 0.245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0.295까지 상승하더니, 2011년에는 0.289 수준이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도 소득의 불평등을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1992년에 3.72배, 2009년 4.97배, 2011년 현재 4.82배 수준이다. 또한 한 사회의 중간소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1년에는 7.1%였으나, 2011년에는 12.4%로 높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1.7%에서 67.5%로 줄었고 빈곤층 비율은 19%에서 20%로 증가했다.

양극화 진단

소득분배구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분배구조이다. 주요 자산에는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만 따진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10년 0.62로 악화되었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는 2005년 0.66에서 2010년 0.70으로 상승해 부동산 자산분배에 대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추세도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5년 땅 부자 상위 10%(약 500만 명)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98.3%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50만 명)은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분배의 불평등은 임대료 및 지대 수입의 불평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분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층의 확대도 양극화의 또 다른 단면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5분위 배율은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증가했으며, 노년층 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 숫자는 급증한 반면 중간 일자리의 비율은 감소했다. 여기서 상위, 중위, 하위 일자리

는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임금 수준이 좋거나 나쁜 양 극단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리본형'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임금 소득자 중 중간 임금(중위 소득의 66%~133%) 소득자 비중은 43.5%에서 35.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간 소득자 보다 낮은 하위 임금 소득자는 23.2%에서 26.7%로, 중간 소득자 보다 높은 상위 임금 소득자는 33.3%에서 37.9%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양극화는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학력별 임금격차, 높은 사교육비에 의한 교육 기회 등 양극화의 그림자는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간 침체에 시달려 온 일본,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 급성장을 경험했던 중국과 브라질,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쟁격화와 약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념적 영향력을 강화해 온 신자유주의 사상과 그에 기초한 경제·사회·국제질서의 확립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신뢰하여 자유경쟁이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규제 완화, 정부개입 축소, 세금 감면,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 자유무역 추구, 관세 인하,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경쟁에서 패배한 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보호제도는 약화되었다.

경쟁격화와 함께 약자가 숨 쉴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혁명과 물류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저임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과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체크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판매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물류의 발달과 관세 장벽의 완화로 소비자들은 세계 어디서나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승자독식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나 약자의 입지는 급속하게 줄어들어 버렸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단숨에 세계적 스타가 되는가 하면, 탁월하지 못한 가수는 밥 벌어먹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노동절약적인 기술의 진보

급속한 기술의 진보도 양극화를 가져온다. 진보하는 기술 대부분은 노동절약적이다. 로봇과 자동제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이다. 기계는 지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 무한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연히 자동화 투자를 늘린다. 이러한 자동화 기계를 제어하고 통제하며 설계하는 고급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겠지만, 고급인력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결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빈곤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로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충격이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도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된다. 세계 구석구석이 무역으로, 자본 시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구석진 곳에서 발생하는 충격도 금방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었던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물론 중국의 가뭄이나 러시아의 흑한 피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제 충격은 경기변동을 가져오고 경기침체 시기에는 보호막이 없는 빈곤층과 비숙련노동자, 비정규직, 노인층 등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결론

경기가 출렁일 때마다 양극화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약자는 가진 것을 잃지만,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극화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확보와 판로에서 세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의 혁명을 거스를 수도 없다. 세계가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데 우리만 경쟁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경쟁에서 패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대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재원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나 세금강화는 자본의 해외탈출을 촉발하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열린 자세로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동근 영남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퍼듀(Purdue)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현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영남대 기획처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문위원, 대구시 경제지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